

환경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길

진명호(환경부 환경교육팀장)

1. 들어가며

환경부에서 환경교육과가 폐기된 이후 거의 20여 년 만에 환경교육팀이 환경부 내 과 단위 팀으로 부활하였다. 환경교육 팀장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환경교육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좋은 성과는 더욱 더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를 정하는 일이다.

먼저 환경교육이 국가 정책차원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1990년 8월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교육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2년 10월, 교육부에서 6차 교육과정 개편 시 환경과목을 독립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다. 1993년에는 환경부 환경교육과를 신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국가 환경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또한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5년을 주기로 국가차원의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지역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환경교육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민간교육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초기에 정착하고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9년 환경부에서 환경교육과가 폐지된 이후 국가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을 잃었으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마련된 국가 환경교육체계도 제도로 작동하지 않고 산발적이면서 분산적으로 환경교육이 추진되었다. 또한 환경교육 현장에서도 소규모·단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일선 학교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도 차츰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반면, 최근 사회적 참사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전 지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 등 우리에게 당장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환경문제도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과거와 같으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규제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안 환경문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며, 환경교육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환경교육의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2. 환경교육에 대한 진단

환경교육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환경교육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관 등 환경교육 관련 주체 간에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채 비체계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교육의 주관부처인 환경부 내에 전담부서가 없어 환경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의 정책적인 연계도 미흡하였다.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에서도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하고 일부 기관은 교육계획조차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갖추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 민간 등 다양한 환경교육 주체들의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센터의 경우 본연의 센터기능과 동떨어지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순히 대행하는 위탁대행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지역센터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7개 지자체만 지정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매5년 주기로 추진하는 수립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경우 현재 제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시부터 제1차 계획에 대한 면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기존 계획의 연장선상에 그치고 있고, 지역계획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립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자체별로 계획기간도 다르고 상위계획과의 일관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실한 환경교육 계획도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문제는 환경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담당자들에게 환경교육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동기조차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을 지자체에 시달한 후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지 않아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력, 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부에서 환경교육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이며 환경부도 교육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양 부처가 환경교육과 관련한 협력사업도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에서 핵심적인

주체인 지자체, 지역 교육청, 민간 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먼저 중등교육 과정인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목 채택률이 한문, 제2외국어 등 타 선택과목에 밀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 등 대응 노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환경교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09년 이후 환경교육 전공교사가 한명도 채용되지 않았으며, 매년 전국 4개 사범대학교에서 배출하는 환경교육 전공자는 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고 대구대학교에서는 최근에 환경교육학과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내에서 환경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원투입이 필요하나 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분야 등 타 분야에 비해 적은편이며, 그마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환경교재 개발·보급,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업 등 단편적인 사업에 그쳐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에서 환경교과목을 채택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도덕, 사회 등 일반교과목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사가 아닌 일반교사의 환경전문성은 매우 열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사회환경교육도 정부,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많은 주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부부처의 경우 해당부처의 역할에 맞게 환경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교육이 되지 않고 환경부 내부에서도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과 집행, 교육 성과관리 등 교육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단위 환경교육은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사회환경교육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사회환경교육 추진 현황 >

환경부(실·국)	
소속 기관	산 하 기 관
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 기술인 법정교육 교원 연수교육 	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 시민청소년 교육 교원 연수교육
지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교육 홍보단 운영 	환경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 교원 연수교육 일부 학생교육
	환경공단/매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양성
	기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협회 - 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름이 이동교실 등 학교교육 지원 프로그램 인증 등 제도 운영지원 기술인 법정교육
	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 시민청소년 교육 교원연수
지자체	전문가 교육(녹색환경지원센터 등), 법정교육, 일반 시민교육 등
민간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 207개소* * 지자체 26, 공공기관 58, 민간교육단체 80, 기업 25, 기타 18

이렇게 사회환경교육 각 주체들이 교육을 분산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육대상이 청소년 위주로 선정되어 사회취약 계층, 장년층 등에 대한 환경교육이 부실하고, 환경교육 분야도 숲생태 등 자연분야에 편중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건, 증감소음, 폐기물 재활용 등 생활환경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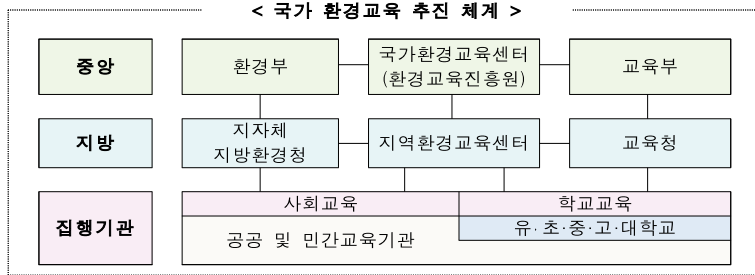
3.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및 정책과제

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
전략	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출중한 환경교육 실현 ③ 환경교육 관련 기관·제도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목 표	정 책 과 제
국가 환경교육 체계 확립	① 국가 환경교육체계 마련 및 주체별 역할 정립 ② 환경교육정책 성과평가 체계 마련 ③ 환경교육 핵심 주체별 네트워크 구축
학교 환경교육 정상화	④ 학교 내 환경교육 교과과정 확대 ⑤ 학교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⑥ 학교 환경교육 인식 제고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⑦ 사회 환경교육 지원체계 개편 ⑧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제고 및 다양화 ⑨ 사회 환경교육 제도 개선
환경교육 기반강화	⑩ 환경교육 기반(법령 등) 정비 ⑪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⑫ 환경교육 홍보 강화

가. 국가 환경교육체계 확립

국가 환경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민간교육 기관에 이르기까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로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여 환경교육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각 주체의 역할을 환경교육진흥법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관		주요 역할
중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법·제도 운영, 예산 등 환경교육 관련 정책 총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정책에 환경교육 반영 및 공동 협력 사업추진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 제도운영·정책지원 총괄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보급 및 시범사업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총괄 환경교육 통계, 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 환경부 등 정부 위탁사업 대행업무 배제
지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 지역환경교육 총괄 조직 내 환경교육 전담인력 배치 지역 환경교육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기초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관리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조례 제·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환경교육 총괄 조직 내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 지정
	광역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교육 총괄 거점 기관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지원 지역 환경교육 통계 작성·관리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수립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전년도에 관련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작업반 구성 및 내외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하고, 지자체 계획은 환경부 종합계획이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 및 지역계획은 연차별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예산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 관련 최고 심의기구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정부위원을 환경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위주로 축소하면서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실무 담당자간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에 환경교육진흥 실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중앙 핵심부처인 교육부와 환경부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관급 이상의 인적교류가 바람직하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지방환경청-교육청간에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환경부, 지자체, 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단위의 환경교육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교육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시민단체, 민간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교육주체들이 환경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환경교육한마당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나. 학교환경교육의 정상화

위기에 직면한 학교 환경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채택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선택을 유인하는 정책과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교과목을 채택하고 환경교사를 채용한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를 환경교육진흥법에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청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장, 장학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 환경교육 관련 논의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의무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1안으로는 현재 재난대비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에 법적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제2안으로는 얼마 전 개정이 완료된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에게 환경교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규정 마련한 것의 후속조치로 교육과정 개편 시 환경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무화 방안에 대해 어느 안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과목을 채택하지 않은 학교, 유아 및 초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목 시간외에 활용이 가능한 자유학기(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초·중등 환경교육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구 분	활 용 시 간	프 로 그 램	
		공 통	특 화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 학교-민간 연계 지원 프로그램	· 환경탐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 초·중·고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학년)제 활용 중·장기 프로그램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지속가능발전 교실 운영 · EBS 방송 환경교실	· 환경진로 체험교실 (실업계 고등학교)

초·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교육에 취약한 유아 및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한다.

< 유아 및 대학 환경교육 프로그램 >

구 분	현 황	개 선
유아	· 유아 환경교육관(3개) 운영 등 시설 위주 교육 실시	· 유아-민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시설 위주 → 누리 과정과 연계한 놀이·체험형 프로그램) · 유아 교원 심화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대학교	· 대학 환경교양 교재 개발	· 대학 환경교양 강화(선택) 개설 · 환경동아리, SNS 환경기자단·블로거 운영·지원

또한,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범대, 교육대 등 대학생 예비교사들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양교재와 환경교육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고, 교원연수원 등 교사 연수과정에 환경 교과과정을 포함하는 등 일반교사의 환경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환경방학 선언(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및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역차원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사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교육도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회환경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교육이 청소년 등 특정교육대상이 아닌 사회 모든 구성원이 환경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 교육대상 맞춤형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사례) >

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비 고
청소년	·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 및 소속기관과 연계한 환경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 중·고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을 활용한 환경봉사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형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생태관광 연계) · 환경기술교육(환경 자격증 과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일자리와 연계하여 국가자격과정 지원	공 적 자 금, 기 업 후 원 금 등 활용
노인계층·은퇴자	·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생활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활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등 여가 및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한 기초 환경프로그램 운영	환경보건, 재활용 등 생활환경 중심 교육
군인 대상	· 군·관 환경협의회를 활용한 군부대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찾아가는 환경프로그램 운영	

또한 정부의 적은 재정투입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단체(YWCA, YMCA, 흥사단 등) 및 종교단체와 함께 환경과 문화, 예술, 종교 등을 접목한 융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대강지역, 시화호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교육하는 환경현안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공동체 우수 모델 사업 등 다양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 환경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환경교육기관 신고제 도입을 모색하고 현재 3급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제도도 1급과 2급 양성과정을 도입하면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처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라. 환경교육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기본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비하고 환경교육에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환경교육상도 신설할 계획

이다.

또한, 국가 환경교육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 통계를 작성하고 환경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타 매체에 비해 홍보 파급효과가 큰 방송,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4. 맺음말

환경부에 환경교육 전담부서가 부활하고 국가의 환경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교육팀장이라는 직책이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모 광고의 카피에서 '새로운 세상은 아침을 깨우는 새벽처럼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환경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